

송영무·조대업 청문보고서 끝내 무산

〈국방〉 〈고용〉

“역대급 부적격” 野 반발속 추후 일정도 못잡아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이견 없이 당일 채택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송영무 국방부, 조대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인 3일 여야는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를 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청문회 직후 바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으로 입장을 돌리면서 가능했다.

하지만, 송영무·조대업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방위는 송영무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환경노동위는 이날 김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조대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으로 상정하지도 못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관계로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안전으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

책위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와 묶어 “역대급 부적격 3중 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이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 부적격 의견만 담은 청문보고서가 아닌 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환노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김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는 종합의견에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선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무적 능력을 길러왔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김 후보자 논문심사 적격 여부와 김 후보자 아들의 재단법인 회맹제

작소 특혜취급 의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청와대 비서관 경험을 제외하고는 정부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고, 특히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부가)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성하는 한편 “현재 환경부 정책은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계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경 열차’ 국민의당 합류

한국당 위원장 말은 4곳 제외 상임위 가동

여야 대치 국면에 담보 상태를 이어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일 국민의당 ‘인사청문회-추경’ 분리 대응 방침으로 해법 마련에 골몰가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능한 상임위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 열차를 출발시킬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13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주 정무위와 미방위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성급한 진행에 반발, 불발됐다. 여기에 야권이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치른 송영무(국방부)·조대업(고용노동부)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하다며 추경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추경 문제는 더욱 꼬

여겼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경 참여를 결정, 추경 해법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당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에 정권교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하자는 내용을 담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전제로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법적 요건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적 측면의 수정에 노력한다면 실마리를 열어가 수 있다”는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에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은희 광주 경찰 간담회

‘중부서’ 신설 논의

경찰 출신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3일 광주 지역 경찰관들과 만나 가정 ‘중부경찰서(첨단서)’ 신설 등을 논의했다.

권은희 의원과 같은 당 최경환·김경진 의원은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교육관에서 ‘광주지역 경찰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 5개 경찰서 경찰관 40여명이 참석해 각각 인구 40만명이 넘는 관산경찰서와 북부경찰서의 치안수요를 분담할 첨단 2지구 경찰서 신설과 지구대·파출소 노후화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 범무법민 이우수의 장은백 변호사가 ‘인권친화적 경찰 수사 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 개혁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권 의원은 “현행 경찰 개혁 방안은 정부 주도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 경찰과 국민의 요구가 수렴되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2지구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광역) 자치경찰제도 도입 시 지역경찰의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경찰 개혁 방안 추진 과정에서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결위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후보가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율 회복·보수 위상 회복 시험대

홍준표 한국당 대표 “인적·조직·정책 3대 혁신”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구하기 위해 직전 대선에서 후보를 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3일 대표로 다시 나서 당을 이끌게 됐다.

홍 신임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 진영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다 보니 ‘무혈입성’에 가까울 정도로 손쉽게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 나온다. 당 앞에 놓인 문제 대부분이 손을 대기조차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 ‘보수 분류’로서 위상을 되찾는 게 최우선 과제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월 대선 이후 8~10% 사이를 맴돌다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조사(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7%로 곤두박질했다. 장담 이후 최저치로, 바른정당에도 뒤졌다.

말 그대로 비상사국인 만큼 홍 대표 입

장에서는 쇄신의 동력을 확보해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고 보수 진영을 재건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바른정당과 ‘보수 적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적폐 세력’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 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의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며 “인적·조직·정책 3대 혁신을 위해 즉각 혁신 위원회 구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홍 대표가 진박(진박근)계 청산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나왔으나 다른 발언을 했다. 홍 대표는 “내부 총질은 안 된다”며 “선출직 청산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靑 “北 평창올림픽 참가결정 후 방법 논의”

청와대는 3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 등과 관련해 일단 북한의 참가 문제부터 확정된 이후 참가 방법과 형태가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참가 형태나 방법은 참가가 확정된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이라고 직접 언급하신 적이 없다”며 “무주 세계 태권도대회 당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좋은 성적을 거둔 예를 들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

가를 말한 것이다. 오늘도 북한의 참가 자체에 방점이 있고 참가 형태는 참가 확정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타진한 것과 관련, 박 대변인은 “오늘 참석자였던 유승민 위원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스포츠 기여 정도를 감안해 3명으로 늘리는 게 어머냐고 얘기했고, 바흐 위원장은 한국의 국제스포츠 참여 정도를 고려해 정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IOC 규정에 따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정위, 靑 산하에 ‘국정기획위’ 설치

국정과제 이행 점검·독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종료된 후에도 청와대에 별도 기구를 신설,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은 대변인은 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청와대 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이행을 계속 점검하고 독려하는 기구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름은 가장 ‘국정기획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총리실에서도 각 부처의 공약 이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보고받는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애초 이달 말 예정이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통령 보고를 대통령 방미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활동기간은 5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無 罊

무罊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罊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